

시론



신 춘 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세이의 법칙’으로 유명한 프랑스 고전주의 (Classicism) 경제학자 장 밥티스트 세이 (Jean-Baptiste Say)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개론: Traite d'economie politique」에서 앙트레프레너 (Entrepreneur)를 “경제적 자원을 낮은 생산성 영역에서 높은 생산성 영역으로 이동시켜 더 큰 수확을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세이는 이 책을 통해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을 저술한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Adam Smith)보다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스미스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 조세프 슈페터 (Joseph Alois Schumpeter)는 앙트레프레너를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서 혁신을 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창조해 내고, 새로운 원자재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질서를 파괴하는 인물이라고 정의했다.

시대를 앞서간 앙트레프레너, 김만덕

이러한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의 개념은 20세기 초 독일 경제학자 베르너 쏰바르트 (Werner Sombart)에 의해 처음 제시됐다고 하며, 앙트레프레너의 창조적 힘이 국가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를 슈페터가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으로 확립한 것이다.

그리고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Peter Ferdinand Drucker)는 앙트레프레너를 “새롭고 차별화되는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앙트레프레너들이 있어 왔으나 제주에서 활동했던 여성 상인 (商人)으로 크게 성공해 큰할머니로 존경받은 인물인 제주 상인 김만덕 (金萬德, 1739~1812년)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상인조직이 존재해 왔는데, 특히 조선 건국과 더불어 지역 기반의 상업활동은 더욱 발전했고 조선의 중기 및 후기에 이르러 전통 상인들은 독자적인 상인조직과 체계를 유지하며 발전했다.

김만덕은 중개상인 김응열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후 친척 집에서 기거하다가 어느 기녀 (妓女)의 집에 맡겨지면서 관기 (官妓)가 됐다. 그 후 제주 목사 (牧使) 신광익 (申光翼)에게 탄원해 양인 (良人)의 신분을 되찾아 제주 건입포 (建入浦) 일대에 객주 (客主)를 차려 큰 돈을 벌었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신광익의 본관은 평산 (平山), 자는 자경 (子敬)으로 영조 (英祖) 37년인 1761년

제주목사로 부임해 이듬해 제주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이 속출하자 이들을 구휼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세금을 감면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만덕은 정조 (正祖) 18년인 1794년 제주도에 또다시 대기근이 들었을 때 자신의 사재 (私財)를 들여 내륙에서 쌀을 구해 제주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수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구해 줬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제주상인과 전남 강진의 병영상인이 매우 활발한 유통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제주도와 강진과의 해류에 따른 지리적 이점, 제주도가 강진 병영성 (兵營城) 관할 지역이라는 점, 제주도에 돌이 많아 제주 기술자들이 돌을 잘 다뤄 병영성 축조에 많이 투입된 점 등을 볼 때 내륙에서 구한 쌀과 물자가 강진 병영지에서 구입했을 개연성이 높다.

강진과 제주도의 이런 해상 교통의 강점은 조선 중기 및 후기 김만덕의 상업행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제주를 탐라 (耽羅)라고 부르고 강진을 탐진 (耽津)으로 부르는 것도 이러한 강진과 제주도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 상인 김만덕은 당시 상업과 상인이 가장 천시받았던 직업과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상인 기질과 절약을 통해 거상 (巨商)이 됐으나 결코 인색하지 않고 근검절약으로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자선 사업에 베풀어 과히 앙트레프레너로 불리울 만한 인물이라고 본다.

社說

시·군 분담액 차이따른 전남 출생수당 차별 안 된다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 2024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 까지 매월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올해 2월 업무협약을 맺어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도는 지난 8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조례를 근거로 지급을 앞두고 있다.

반면 시·군은 현재까지도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 보전복지부는 장기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 가능성과 실효적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가 자체 부담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와 10만원씩 분담해야 하지만 5만원으로 하향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회보장 신설은 12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문제는 시·군별로 수당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우려다. 아이들은 태어난 지역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애초 전남도와 시·군은 협약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구가 곧 경쟁력이라는 전제 하에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한 혁신적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실제로 한 명당 18년간 총 지원액은 4천320만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천만원까지 가능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인 양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출발부터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에서 양육까지 지역사회가 더불어 나누는 새로운 모델의 의미가 반감되기에 충분하다. 전남도는 매칭 사업이 아니라며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줄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광역·기초지자체 3자가 협력해 18년 간 지원하는 ‘318 프로젝트’를 국가정책화하기 위해 전력하는 상황이다. 적극 행정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남은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출생수당은 각 지자체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 시·군은 협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도입에 따른 난제를 원만히 해결해 기반을 잘 다져 주길 바란다.

유명무실 광주 자치구 식물위원회 과감히 정비해야

광주시 각 자치구 또한 해마다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다양화된 행정 기능 보완, 정책 수요에 대응해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 아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재 동구 127개, 서구 144개, 남구 115개, 북구 112개, 광산구 123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회 이하로 회의를 연 위원회는 동구 25개 (19.7%), 서구 22개 (15.3%), 남구 12개 (10.43%), 북구 13개 (11.6%), 광산구 20개 (16.3%)에 이르고 있다.

최대 20% 가까이 가 사실상 문을 닫아버는 셈이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광주시 2개, 서구 2개, 남구 2개, 북구 1개 등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있으니, 폐지 등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다. 자치구들은 매년 위원회 정비를 위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폐지 등으로 조치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된 위원회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고 한다. 지자체는 산하에 여러가지 명목을 들어 위원회를 남발하는 실정이고, 덩달아 있으나마나한 ‘식물위원회’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여론호응으로 이용하거나 정책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해 면피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세금의 낭비도 지적된다. 아울러 위원 추천이나 검증 절차가 허술한데다 중복 위촉 등 선임 과정의 불투명, 여기에 일부 비위 문제까지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자치구들이 겉껍데기 위원회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수도무하다.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설치, 운영돼야 하겠지만 편법 수단으로 전략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손질하는 게 맞다. 꼭 필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신중 검토해야 한다. 법령 상의 강행 규정부터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는 등 내실을 기하도록 전격해야 한다. 위원회 난립은 행정의 비효율을 부른다. 공식사회의 무능, 무책임에서 이젠 자유로워질 때 아닌가.

기고



윤 예 심

담양소방서장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세요.”

2012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014~2023년) 화재 41만497건 중 주택화재는 7만 5천215건으로 연평균 7천522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144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0년이 지난 지금

있다.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지만 화재 사망자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에 달해 인명피해가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 화재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에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돼 있지만, 일반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1977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은 사망률이 설치 이전보다 40% 이상 감소했다. 영국은 설치를 을 1989년 35%에서 2011년 88%까지 끌어올려 화재 사망자가 54% 감소했으며, 일본은 2014

년 설치율 81%를 달성한 뒤 10년간 화재 사망자를 12% 줄였다.

이처럼 작은 소방시설 하나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통계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이처럼 작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의 설치·필요성은 통계에서 보듯이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관계인 초기대응은 어려워졌으며, 결국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 글을 읽는 순간만큼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분명 생각지 못한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가성비별 가진 소방시설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내 가족,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수능시험 종료 끝이 아닌 시작이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수능시험을 망쳤다고 느낀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우를 매년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접하곤 한다.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어른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불행한 방송뉴스가 2024년을 시작으로 없길 기원한다. 매년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큰 산과 문턱을 넘었다고 느끼며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강해진다.

입시 과정에서 느꼈던 과도한 압박감이 풀리고 교육 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시기에 성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출입할 수 없는 유해업소를 출입한다거나, 음주와 담배 구매 또는 요즘 불나방처럼 번지는 불법 음란물 (딥페이크)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선도·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능이 끝났다고 분위기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해 환경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육 당국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사 운영에 매진해야 하겠다. <곽헌태·고흥경찰서 안양파출소장>

수확기 농민의 땀방울 함께 지켜야

주간에는 파출소에서 탄력순찰, 야간에는 생활안전협의회원, 자율방범대와 구석구석 합동순찰로 농축산물 도난예방에 힘썼다.

이상 기후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도난의 위험도 높아졌다. 일년동안 애써 가꾼 농민들의 수확물을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농심을 울리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경찰은 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지역을 지켜내는 공동체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승욱·장흥경찰서 안양파출소장>

독자투고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다. 청소년기 처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 과정, 그리고 재수, 검정고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자신과의 가나긴 인고의 시간과 싸우며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시간이 이제 모두 지나갔다.

누군가는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며, 또 누군가는 과도한 긴장 속에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한 공부의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시험성적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고교생 대다수가 한 번쯤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지 수능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수능성적이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한

머칠전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농산물을 잃어버렸다고 80대 노인이 전화가 왔다. 착오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린 기억이 있다.

장흥경찰서 안양파출소에서는 수확기 농축산물 도난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와 야간 합동 순찰을 하는 등 지역 맞춤형 순찰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관내 주민 100여명이 타 지역 연수를 가는 바람에 집들이 당면 것을 감안, 사전순찰을 접수 받고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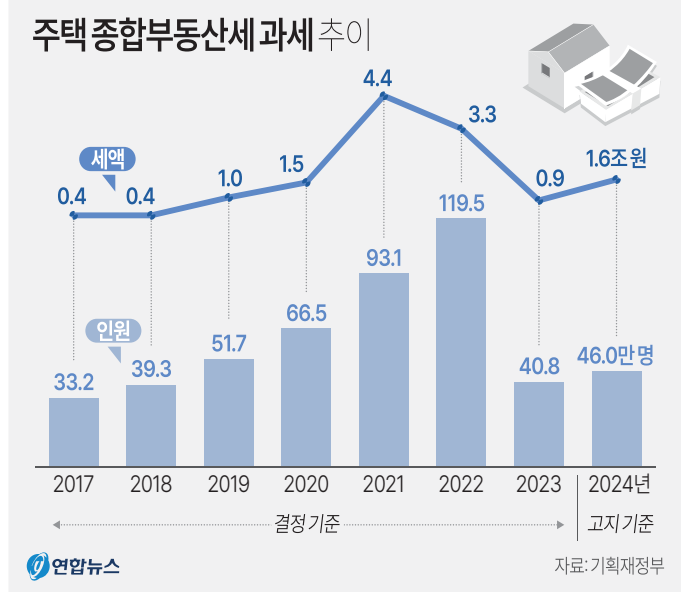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주택보유자 2.9% 증부세 낸다…작년 비 5만 늘어난 46만명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천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적 시장가액비율 (100→60%)도 하향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증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고지한 증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증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천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천961명 (11.6%) 늘었다. 문제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났다가, 지난해 큰 폭 꺾였다. 세액은 작년보다 1천261억원 (8.5%) 늘어난 1조6천122억원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 (일간)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